

주간 통일정세

2018-0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0	北, '신년사 관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연합뉴스)
	1.22	北 "외무성·中·국제기구, 유엔 협조물자 반입 논의"(연합뉴스)
		北매체, '과학기술로 대북제재 돌파' 연일 강조(연합뉴스)
	1.23	북한 고위관료, 미 언론에 "핵개발은 대화 의제 안돼" 일축(연합뉴스)
	1.25	北김정은, 평양제약공장 방문...올들어 세번째 현지시찰(연합뉴스)
北, 정부·정당·단체 회의 "南, 美와 전쟁연습 영원 중단해야"(연합뉴스)		
군사	1.23	北, '건군절' 열병식 준비 병력·장비 증가...전투기도 동원(연합뉴스)
경제	1.22	"北선박들, 작년 하반기 중국보다 러시아 더 많이 항해"(연합뉴스)
	1.23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연합뉴스)
사회 문화	1.23	北 "女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 선발대와 함께 25일 南 파견"(연합뉴스)
	1.25	北통신, 南선발대 귀환일에 '원산갈마지구' 홍보(연합뉴스)
외교 국방	1.21	대만,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선박 2척 입항 거부(연합뉴스)
	1.22	EU, 북한 국적 17명 추가 제재...여행금지·자산동결(연합뉴스)
	1.23	美國무부 "평창올림픽 종료 전후에 北관리 만날 계획 없어"(연합뉴스)
		北, 푸에블로호 사건 50주년 맞아 대내 선전·대미 비난(연합뉴스)
		北, 美전략자산 전개 비난 "핵위협 맞설 역지력 갖춰"(연합뉴스)
	1.24	北 "美 정세완화에 찬물...심상찮은 군사적 움직임"(연합뉴스)
	1.25	美, 한달만에 고강도 대북제재... '최대 압박'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적도기니, 자국내 북한기업 상업활동 중단·국적자 송환 北통보(연합뉴스)
1.26	北단체, 아태의회포럼 대북결의 비난... "긴장격화 편승 말아야"(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25	평양제약공장 현지지도	리설주, 박태성, 최동명,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1. 25.

■ 北김정은, 평양제약공장 방문·올들어 세번째 현지시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며 그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 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약품 가짓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함.
- 이와 관련, 그는 평양제약공장 개건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으며, “(개건 현대화 투쟁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공화국 창건 일흔 돌 전으로 끝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번 시찰에는 박태성 당 부위원장과 최동명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1. 20.

■ 北, ‘신년사 관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과업 관철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내각 구성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며 “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8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밝힘.
- 또 “지난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들을 분석·총화(결산)하였다고 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덧붙였다.

다. 주요 기관 행위

2018. 1. 22.

■ 北 “외무성·中·국제기구, 유엔 협조물자 반입 논의”(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지난 21일 홈페이지 ‘소식’ 코너에 게재한 글에서 “18일 외무성이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주북) 외교단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장에서 우리 외무성 일꾼과 주조 중국대사, 주조 국제기구 대표들 사이에 조선(북한)에 대한 유엔의 협조물자 납입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밝힘.
- 외무성은 이어 “연회에 참가한 기자가 목격한 데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주의 협조물자 제공에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조 중국대사는 중국은 조선에 대한 인도주의 협조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주조 유엔 상주조정자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은 현재 협조 설비와 물자들이 중국 측의 조치들로 하여 수송이 지연되거나 납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1. 22.

■ 北매체, ‘과학기술로 대북제재 돌파’ 연일 강조(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2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 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의 투쟁 역사와 현실은 과학기술 발전이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제재봉쇄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총동원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위대한 당의 영도가 있고 믿음직한 과학자 대군이 있기에 두려울 것도, 점령 못 할 요새도 없다”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과학기술 결사전에 총매진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 그러면서 금속공업·농업·전력·에너지·화학공업·경공업·수산업 부문의 자급화와 과학화를 강조함.

2018. 1. 23.

■ 북한 고위관료, 미 언론에 “핵개발은 대화 의제 안돼” 일축(연합뉴스)

- 북한 정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미국 NBC 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북한 현지에서 취재 중인 NBC의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는 이날 ‘나이틀리 뉴스’(Nightly News)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은 (한국과의) 대화의 일부가 아니며, 테이블에 올라 있지도 않다”고 했다고 밝힘.
- 이 관료는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술을) 쌓아올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보유국이며, 주권과 존엄성을 위협받으면 그때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2018. 1. 25.

■ 北, 정부-정당-단체 회의 “南, 美와 전쟁연습 영원 중단해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과업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이어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채택됐다고 호소문 전문을 별도로 게재함.
- 호소문은 북핵 문제와 관련,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돌아치는 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강변했으며, 이어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고 주장함.
- 또 “북남 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오늘 미국의 흉물스러운 핵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내외 호전광들의 위협천만한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 책동을

-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자”고 요구함.
- 이와 함께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1948년)가 개최된 지 일흔 돌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언급하며 “북남선언 발표 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돌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에는 북한의 대남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또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 등 북한 대남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1. 23.

- 北, ‘건군절’ 열병식 준비 병력·장비 증가…전투기도 동원(연합뉴스)
 - 북한이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월 8일을 ‘2·8절(건군절)’로 공식 지정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군 열병식(퍼레이드) 준비에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3천여명과 장비 200여대가 동원된 가운데 군 열병식 예행연습을 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보다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힘.
 -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군 열병식 예행연습에는 병력 1만2천여명과 장비 50여대가 식별됐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병력은 1천여명, 장비는 150여대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특히 북한은 열병식 예행연습에 SU(수호이)-25 전투기와 AN-2 저속 침투기 등 항공기를 동원해 ‘축하비행’(에어쇼)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1. 22.

- “北선박들, 작년 하반기 중국보다 러시아 더 많이 향해”(연합뉴스)
 - 북한 선박들이 지난해 하반기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VOA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93척의 행선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항구가 38척, 러시아 항구가 55척으로 나타남.
 - VOA는 과거에도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중국행 북한 선박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덧붙임.

2018. 1. 23.

-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농업과 관련한 시설 개선과 기술 전수 등 총 7건의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FAO는 현재 기술·시설 지원 5건, 자금 지원 2건 등 모두 7건의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과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업은 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임.
 - FAO 북한 담당 분석관은 “곡물 보관용 시설 확충이나 곡물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안보, 가난한 농촌 지역에 대한 기술과 장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8. 1. 23.

- 北 “女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 선발대와 함께 25일 南 파견”(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25일 파견하는 선발대와 함께 남측으로 보내겠다고 밝힘.
 - 북측은 이날 우리 정부가 통지문을 보내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남측을 방문, 합동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북측 선수단 15명은 감독 1명, 선수 12명, 지원인력 2명 등으로 구성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1. 25.

- 北통신, 南선발대 귀환일에 ‘원산갈마지구’ 홍보(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올해 조선(북한)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강원도에 위치한 원산갈마지구는 해안관광지구로 유망한 곳”이라며 “원산만 남부에 있는 갈마반도는 오랜 세월 남대천(안변)의 흐름 과정에 생긴 화강암질의 모래가 바닷물결의 작용에 의해 쌓인 육계도”라고 설명함.
 - 또 갈마반도에 있는 백사장인 ‘명사십리’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고 소개하면서 “현대적인 갈마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꾸러지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관광지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중간체류 장소로서 아주 이상적”이라고 덧붙임.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1. 23.

■ 미국무부 “평창올림픽 종료 전후에 北관리 만날 계획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올림픽이 끝나는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미국은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개방적”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는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 北, 푸에블로호 사건 50주년 맞아 대내 선전·대미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발생 50주년을 맞아 대내 선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미 비난을 벌임.
- 노동신문은 이날 ‘항복서를 밟으며 지나온 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언급한 뒤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바친 항복서들에서 피절은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침략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원수들의 모든 본거지가 멸망의 최후무덤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시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제가 푸에블로호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을 침범한다면 그때에는 미국에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美전략자산 전개 비난 “핵위협 맞설 억지력 갖춰”(연합뉴스)

- 북한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CD)에서 어떤 핵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고 주장함.
-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대성 북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같이 주장하면

서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문제를 구실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2018. 1. 24.

■ 北 “美, 정세완화에 찬물…심상찮은 군사적 움직임”(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미국의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강화 움직임을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선반도에 모처럼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게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그는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한반도 주변 수역으로 기동시킨 데 이어 스테니스호도 곧 출동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미 전자전기 EC-130H 1대가, 괌에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3대와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6대가 배치된 것 등을 거론했으며, 미국이 다음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언급함.
-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연이은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를 자극하여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남관계 진전을 멈춰 세우고 정세 긴장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강변함.

2018. 1. 25.

■ 美, 한달만에 고강도 대북제재…‘최대 압박’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국적의 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는데, 무역·해운 회사들과 더불어 북한의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킴.
- 미국은 이번 제재도 초점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차단에 맞추어,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6명 중 WMD 관련자가 11명에 달했으며, 그중

10명은 북한 무역회사인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에서 군수 물자 취득과 군 관련 수출 업무를 해왔음.

-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다른 불법 사업을 지원하는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1. 21.

- **대만,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선박 2척 입항 거부(연합뉴스)**
 - 대만 연합보의 21일 보도에 의하면, 전날 빌리언스 18호(킹스웨이호), 빌리언스 88호(트윈스불호) 등 선박 2척이 대만 해안순방서(해경)에 남부 가오슝(高雄)항 입항을 신청했지만, 해안순방서는 이를 거절함.
 - 전날 저녁 해안순방서 직원 4명은 빌리언스 88호에 승선해 이 선박이 석유제품 등 대북 금수 물품으로 지정된 화물을 실었는지 검사했는데 조사 결과 금수 대상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음.
 -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대만 당국은 “해운회사와 무역 회사, 수출입업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나 대북 밀수가 의심되는 선박을 임차해 조사나 압류 등 손실을 자초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018. 1. 22.

■ EU, 북한 국적 17명 추가 제재...여행금지·자산동결(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 17명에 대해 불법 무기 거래 등에 관련된 혐의로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 EU는 이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면서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설명함.
- 추가 제재를 받은 17명은 대부분 북한 기업의 고위층 인사들이며 정부 고위 인사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치로 EU 제재에 포함된 북한 인사는 58명으로 증가함.

2018. 1. 25.

■ 적도기니, 자국내 북한기업 상업활동 중단·국적자 송환 北통보(연합뉴스)

- 아프리카 적도기니가 자국에서의 모든 북한 기업 상업활동 중단과 북한 국적자를 모두 긴급송환할 것을 북측에 지난해 11월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VO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적도기니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함.
- 적도기니는 보고서에서 “2371호 결의에 따라 적도기니 정부는 2017년 11월 3일 자 구술서(외교문서의 일종)에서 (수도) 말라보의 북한 대사관에 북한 기업들이 모든 상업활동을 중단하고 해당국의 모든 시민을 긴급히 송환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적도기니) 정부는 이것과 관련해 다른 준비사항과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 1. 26.

■ 北단체, 아태의회포럼 대북결의 비난...“긴장격화 편승 말아야”(연합뉴스)

- 북한 조선·아시아협회 대변인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근 열린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결의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난한 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이어“(APPF) 회의 참가자들은 누가 평화 파괴의 주범이고 누가 진정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를 고의로 부채질하는 행위들에 편승하지 말아야 하며 행동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1.22	김현중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연합뉴스)	
	01.25	송영무-매티스, 26일 하와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연합뉴스)	
		한반도본부장, 美재무차관과 협의…“대북압박 빈틈없는 공조”(연합뉴스)	
	01.26		미 국무부 “남북대화 지지…한국서 멋진 올림픽 고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1.26		中 쿵쉬안유 “남북교류 적극 지지…북미대화 이어져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1.22		日외무상, 외교연설서 5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되풀이(연합뉴스)
			아베, 시정연설서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확인…韓중요성은 ‘격하’(연합뉴스)
	01.23		일본 관방, 정현백 장관 ‘화해·치유재단 청산’ 언급에 반발(연합뉴스)
	01.24		아베 “평창 가겠다…文대통령에 한일합의 추가요구 거부할 것”(연합뉴스)

	01.25	정부, '日 독도전시관'에 "강력항의...즉각폐쇄 엄중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미국	중국
	01.21		中 국방부 "남중국해 근접한 美구축함 쫓아내...주권침해 말라"(연합뉴스)
	01.22		중, 미 국방전략 비난..."중국 굴기에 대한 미국 불안감 기형적"(연합뉴스)
미중 관계		美 지체권 분야 또 중국 압박..."직접적인 위협"(연합뉴스)	
	01.25		주미 중국대사, 美 겨냥 "일방적 무역보호주의 반대"(연합뉴스)
			中외교부, 미국의 일방적 대북 추가제재에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1.24		미군 헬기, 오키나와서 또 불시착...日정부, 美에 "극히 유감"(연합뉴스)
	01.25	"미 B-52 전폭기, 금주초 오키나와서 日전투기와 공동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1.21	미국-러시아 외무, 전화로 시리아 상황 논의(연합뉴스)	
	01.25	미·러 외무장관, 북핵 논의...“대북결의안 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1.26	고노 일본 외무상, 내일 첫 방중...왕이 외교부장과 28일 회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1. 22.

■ 김현중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연합뉴스)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힘.
-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힘.
-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함.

2018. 01. 25.

■ 송영무-매티스, 26일 하와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연합뉴스)

- 국방부는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후(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며 “이 회의에는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방부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월 5일 전화 협의회 직접 만나 소통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했고 이후 미측에서 매티스 장관의 아태 지역 순방 계획을 알려와 이번에 하와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함.
- 이번 회담에서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미뤄진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한반도본부장, 美재무차관과 협의…“대북압박 빈틈없는 공조”(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에서 방한중인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과 오찬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미국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 조치 등 대북제재와 북핵문제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측은 대북제재·압박과 관련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노 대변인은 “맨델커 차관은 베이징, 홍콩, 서울, 도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순방 기회에 방한한 것”이라고 소개함. 맨델커 차관은 이 본부장과의 협의 때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노 대변인은 소개함.

2018. 01. 26.

■ 미 국무부 “남북대화 지지…한국서 멋진 올림픽 고대”(연합뉴스)

- 헤더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종류의 접촉과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함.
- 노트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멋진 올림픽이 열리기를 지지하고 고대한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정권과 가까이 대화하고 싶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더욱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아직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8. 01. 26.

■ 中 쿵쉬안유 “남북교류 적극 지지…북미대화로 이어져야”(연합뉴스)

- 중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는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힘.
- 쿵 부부장은 26일 중국 중앙(CC)TV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은 남북의 적극적

이고 올바른 교류가 지속하기를 원하고 응원한다”면서 “남북이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수년간 대립하며 형성된 매듭을 풀고, 더 나아가서 민족 화합과 자주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함.

- 쿵 부부장은 “우리는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서로를 이해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현재 양측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8. 01. 22.

■ 日외무상, 외교연설서 5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되풀이(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함. 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등 전임자들을 포함할 경우 일본 외무상이 5년째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되풀이한 것임.
-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고노 외무상은 또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측에 거듭 합의 이행을 촉구함. 그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간의 약속”이라며 “한국측도 책임을 갖고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함.

■ 아베, 시정연설서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확인…韓중요성은 ‘격하’(연합뉴스)

-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당에 대해 개헌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아울러 외교분야에서는 한국의 위안부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냄.
- 아베 총리는 그동안 시정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으나, 올해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만 언급하였으며 종전에 사용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4년째 쓰지 않음.

2018. 01. 23.

■ 일본 관방, 정현백 장관 ‘화해·치유재단 청산’ 언급에 반발(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청산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데 대해 “한일 합의는 1mm도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반발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그 합의에 근거해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이 재단에 대해 “이미 기능은 중단됐고, 법적 검토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18. 01. 24.

■ 아베 “평창 가겠다…文대통령에 한일합의 추가요구 거부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반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올림픽 개최식에 참석, 일본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전함.
- 아베 총리는 이날 게재된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평화와 스포츠의 제전이고 일본은 2020년에 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아베 총리는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당연히 강력히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18. 01. 25.

■ 정부, ‘日 독도전시관’에 “강력항의…즉각폐쇄 엄중요구”(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설치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함.
- 정부는 25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25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

히 요구한다”고 밝힘.

- 성명은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1. 21.

- **中 국방부 “남중국해 근접한 美구축함 쫓아내…주권침해 말리”(연합뉴스)**
 - 미국이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해 올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함.
 - 21일 중국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첸(吳謙) 대변인은 군복차림으로 자체 방송에 출연해 이달 17일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인 ‘호퍼함’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12해리(약 22.2km) 안쪽까지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중국 군함이 출동해 쫓아냈다고 발표함.
 - 중국 국방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을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왔으나, 대변인이 군복 차림으로 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을 겨냥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임.

2018. 01. 22.

- **중, 미 국방전략 비난…“중국 굴기에 대한 미국 불안감 기형적”(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국방전략에 대해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갈등과 대결을 초래할 뿐이라며 비난함.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한 이후 성명에서 이같이 밝힘.
 -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방전략’에서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잠식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대사관 대변인 성명은 “중국은 모든 국가와 관계에서 개방의 윈윈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에서 모색하는 것은 지배가 아닌 파트너십이며, 협력과 공동 출자, 상호이익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2018. 01. 25.

■ **美, 지재권 분야 또 중국 압박…“직접적인 위협”(연합뉴스)**

-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 총회 세션에서 “중국은 말로만 자유무역을 옹호할 뿐 행동으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직면하게 될 문제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추진하는 하이테크 기술 분야를 지목함. ‘중국제조 2025’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10개 미래 핵심산업의 대표기업을 2025년까지 육성하겠다고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계획임.
- 로스 장관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시, 산업 스파이 등 모든 종류의 나쁜 수단이 동원돼 실행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재권을 무시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함.

■ **주미 중국대사, 美 겨냥 “일방적 무역보호주의 반대”(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일방적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 25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모든 일방적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행동을 통해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 그는 “중미 무역 관계는 호혜 상생이며 일부 산업 및 제품에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양국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 많은 관련 기업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주장함.

■ **中외교부, 미국의 일방적 대북 추가제재에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 기업을 포함해 대북 추가제재를 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25일

- 이런 일방적 제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화 대변인은 이어 “(미 정부가 추가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 기업 등에 대해) 유관 기업이나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된다”면서도 “어떤 기업과 개인이 중국 영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국내법을 어기는 활동에 한다면 중국은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8. 01. 24.

■ 미군 헬기, 오키나와서 또 불시착…日정부, 美에 “극히 유감” (연합뉴스)

- 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5분께 오키나와 도나키지마(渡名喜島)의 지자체(도나키손<村>) 운영 헬기 착륙장에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소속 공격 헬기 AH-1이 갑작스럽게 착륙함.
- 미군 측은 경고등이 점멸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예방 착륙을 했다고 설명함. 불시착 장소는 주거 지역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지만 불시착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고 헬기도 외관상 큰 손상이 생기지는 않았음.
-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불시착과 관련, “오키나와 현민의 기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측에 안전면에서 최대한 배려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힘.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에게 전화로 “극히 유감”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요청함.

2018. 01. 25.

■ “미 B-52 전폭기, 금주초 오키나와서 日전투기와 공동훈련”(연합뉴스)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지난 22일 오키나와(沖縄) 주변 공역에서 공동훈련을 했다고 NHK가 전함.
- 25일 방송에 따르면 훈련에는 B-52기 2대와 B-1 폭격기 2대,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4대가 동원됨.
- 이번 훈련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방송은 지적함.

다. 미·러 관계

2018. 01. 21.

■ 미국-러시아 외무, 전화로 시리아 상황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터키의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격퇴 작전 개시로 긴장이 고조된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언론보도문을 통해 전날 이뤄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시리아 북부(쿠르드) 지역 안정 확보와 유엔 주도의 평화적 사태 해결 과정 진전 문제 등을 포함한 시리아 상황이 논의됐다”고 전함.
- 두 장관은 다른 국제 현안과 양자문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미-러 양국이 긴밀히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는 소개함.

2018. 01. 25.

■ 미·러 외무장관, 북핵 논의…“대북결의안 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양국 외교 부처가 밝힘.
- 틸러슨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 주최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회의(밴쿠버회의)'에 관해 논의했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함.
-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화통화가 이뤄졌으며 광범위한 현안이 논의됐다”면서 “두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요구(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소개함.

라. 중·일 관계

2018. 01. 26.

■ **고노 일본 외무상, 내일 첫 방중…왕이 외교부장과 28일 회담(연합뉴스)**

- 26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방중 이틀째인 2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해 양국 관계와 대북문제 등을 논의함.
-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에 이어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점에서 전면적 관계개선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함.
- 회담에선 일본이 올해 봄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상호방문 실현 등과 관련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1.23	국무부 “잠재적 북한인권 개선 지원금, 지난해의 두 배”(미국의소리) 북한 억류 케네스 배, 제2의 인생…북한인권단체 창립(미국의소리)
	1.25	미 NGO “북핵 위기에만 초점 맞춰져 인권상황 악화”(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1.21	북, 보위원마저 식량배급 못 받아(자유아시아방송)
	1.23	북 보위원 “강제 복송 늘면 되레 탈북 늘 텐데…”(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1.23	유엔 北인권사무소장 “이산상봉, 정치적 문제와 연계 안돼”(미국의소리) 트럼프정부 들어 처음으로 탈북민 2명 난민자격 美 입국(연합뉴스)
	1.24	탈북민단체 “아이스하키 단일팀 일본전 관람 예매, 응원 참여”(연합뉴스)
	1.26	유엔, 탈북자 등 고문 피해자 지원기금 공모(미국의소리)
대북지원	1.20	유엔 대북 지원 예산 중 31% 확보(자유아시아방송)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연합뉴스)
	1.23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국제적 관심 가장 못 받아(연합뉴스) 북한-중국, 대북 인도적 지원 둘러싸고 ‘신경전’(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1. 23.

■ 국무부 “잠재적 북한인권 개선 지원금, 지난해의 두 배”(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작년 회계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국무부가 밝힘. 공식 책정된 금액은 지난해 보다 100만 달러 줄었지만 대기 자금을 확보해놓음. 한국의 주요 대북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이런 지원이 없으면 활동하기 어렵다고 말함.
-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함. 국무부의 한 관리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의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무부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기금 지원 공고(NOFO)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함.

■ 북한 억류 케네스 배, 제2의 인생…북한인권단체 창립(미국의소리)

-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는 북한인권과 탈북민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설립함.
- 케네스 배는 2016년 세계 각지의 잊혀지고 소외된 난민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국제 비영리기구인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를 설립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NGI 사역본부도 설립함.
- 이 단체의 핵심활동은 북한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며 난민을 구출하고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것임. 또한, 중국 내 사역자들을 통해 쌀과 옷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도 지원할 예정임. 아울러 중국에서 탈북 고아와 탈북민 자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018. 1. 25.

■ 미 NGO “북핵 위기에만 초점 맞춰져 인권상황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 위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주장함.

-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헤드라인을 넘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악화되다’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서로 핵 전쟁 위협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들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함.
-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와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위협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함.
- 또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과 대량 학살에 맞서야 하는 ‘보호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1. 21.

■ 북, 보위원마저 식량배급 못 받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가장 확실하게 배급을 보장받았던 보위성에 대한 식량배급이 두 달째 끊긴 것으로 알려짐.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전위 기관인 보위성에 대한 배급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번 배급 중단사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18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2월부터 지방의 보위부 성원들에게 배급하던 식량공급을 중단했다”면서 “이번 식량공급 중단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위부원에 대한 배급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또 “국가보위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위부원들의 식량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작년 12월 도내 구역보위부에 대한 식량배급이 갑자기 끊긴 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사법기관에 대한 배급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면

체제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급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임.

2018. 1. 23.

■북 보위원 “강제 북송 늘면 되레 탈북 늘 텐데…”(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지방 보위원들이 중국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탈북자의 북송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힘.
- 최근 국가보위성이 각 도의 보위부에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고 탈북 루트를 원천 차단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임. 하지만 탈북 했다 강제 북송 된 사람들로 인해 외부세계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동경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소식통은 이어 “북송된 탈북자들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과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며 “보위원들은 북송자 수가 늘어날수록 재탈북자가 몇 배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1. 23.

■유엔 北인권사무소장 “이산상봉, 정치적 문제와 연계 안돼”(미국의소리)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밝힘.
- 폴슨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설 명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는 남측 제안에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북한의 주장은 어려운 요청”이라면서 “이들은 이동의 자유, 국가를 떠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또한 크나큰 비극”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폴슨 소장은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트럼프정부 들어 처음으로 탈북민 2명 난민자격 美 입국(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탈북민 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10대 여성 2명은 지난 18일 난민 지위로 미국에 입국해 캘리포니아 주(州)에 정착했다고 VOA는 전함. 이로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14명으로 늘어남.
- 미국에 탈북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해 1월 12일 20대 탈북민 여성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약 1년 만이며, 작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임.

2018. 1. 24.

■ **탈북민단체 “아이스하키 단일팀 일본전 관람 예매, 응원 참여”(연합뉴스)**

- 트럼프 탈북민단체 대표들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본전을 관람하기 위해 20여 장의 티켓을 예매한 것으로 24일 알려짐.
- 탈북민단체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14일 오후에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일본 간 경기에 참가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하려고 20여 장의 관람권을 예매했다”라며 “우리 단체에 소속된 탈북민단체 대표들이 응원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2018. 1. 26.

■ **유엔, 탈북자 등 고문 피해자 지원기금 공모(미국의소리)**

- 유엔이 세계 각 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음.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 받을 민간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기금은 지금까지 전 세계 630 단체에 1억8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함.

5. 대북지원

2018. 1. 20.

■ 유엔 대북 지원 예산 중 31% 확보(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에 필요한 유엔 기금의 모금 실적이 목표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자금 모금 현황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사업에는 유엔의 국제구호기금(CERF), 세계식량계획(WFP)과 10개국 등이 지원함.
-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이며 전체 지원의 77.3%인 2천590만 달러를 차지함. 이어 보건 사업에 44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150만 달러가 투입됨.

2018. 1. 23.

■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농업과 관련한 시설 개선과 기술 전수 등 총 7건의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FAO는 현재 기술·시설 지원 5건, 자금 지원 2건 등 모두 7건의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과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그러면서 사업은 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임.
- FAO 북한 담당 분석관은 "곡물 보관용 시설 확충이나 곡물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안보, 가난한 농촌 지역에 대한 기술과 장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국제적 관심 가장 못 받아(연합뉴스)

- 북핵 위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달리 북한의 기아 위기는 국제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구호단체가 지적함. 자연재해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맞물려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함.
- 북한이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로 꼽힘.
-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케어(CARE)’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해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받지 못한 나라 10개 가운데 북한을 1위에 오름.
- ‘고통 속의 침묵’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 위기 가운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았다고 지적함.
- 북핵 위기에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반면 북한의 기아 위기는 전반적으로 무시됐다는 설명임.

■북한-중국, 대북 인도적 지원 둘러싸고 ‘신경전’(미국의소리)

- 북한과 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북한 외무성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을 통해 “여러 국제기구의 협조 설비와 물자들이 중국 측의 조치들로 하여 수송이 지연되거나 납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함.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함.